▶▶ 매일 INDEX

3면
"전북, 특별자치도로 미래 그려가야"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음 12월 12일) 제294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방시대 본격… 중앙-지방 파트너십 강화

자치법 전부개정 근거 마련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정부 국정 참여 기구 제도화한 첫날로 의미 커

송하진 도지사,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개헌 필요성 제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격인 이 날 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2국무회의 설치 공약 실천차원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한 첫날로, 의미 자체가 크다는 평가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과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 효력 발생일에 열린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송하진 지사, 시도지사 16명, 기재·교육·행안·국토·산업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방 4대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국가발전의 새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처해있는 각 시·도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밖에 송 지사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공사 중 아파트 53개 단지 21일까지 현장 긴급점검

도, 민관 합동 시공상태 등 살펴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여파

전북도가 공사중인 아파트 현장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안전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도내 공사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견실한 시공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도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점검단에는 도와 시·군, 구조·시공·설계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민간 공동주택 34개 단지는 11개 시·군에서, 공공임대주택 13개 단지는 LH와 전북개발공사에서 자체 긴급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자재 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대비 현황 등이다.

특히, 구조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정품사용 여부, 현장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비계의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계도를 통해 설 명절 이전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북유럽 혁신교육, 전북 교육에 도입"

황호진 전 부교육감,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학교복합시설 권역별 추진 등 10대 정책 발표

"준비된 교육감, 실력 있는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황 전 부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를 품고 미래를 담은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며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혁신'적인 인사제도는 소위 '편 가르기'와 '코드 인사·보은 인사'로 오용되고 '혁신학교'는 '무늬만 혁신'이다"며, '혁신'이 '혁신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전국 최저수준인 기초학력 문제, 다양성 상실, 형식적인 교육협력, 미래교육 준비부족 등을 언급하며 전북교육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김승환 현 교육감의 12년에 대해 "일방적 비판이 아닌 진단과 성찰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는 이어가야 한다"며, 일부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과거에 멈춰버린 전북교육을 미래로 이끌고 위기에 빠진 전북교육을 구해내기 위해선 준비된 교육감, 실력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인 교육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국내·외 교육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육전문가로서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으로 직접 경험한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의 혁신적 교육시스템을 전북교육에 도입해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전 부교육감은 정치지향적인 출마예정자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이 미래로 갈 것이냐, 과거로 퇴행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선거"라며,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오로지 교육 한 길만을 걸어온 교육전문가를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며, '과거 vs 미래'와 '정치인 vs 교육자'의 구도를 부각시켰다.

그는 끝으로 "교육감 선거는 전북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교육으로 위기의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실력 있고 준비된 교육전문가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황 전 부교육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황호진이 만들어 갈 전북교육대전환'의 10대 중심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복합시설 권역별 추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기초학력 완전 보장체계 구축 ▲'AI기반 융합교육' 미래교육 강화 ▲100% Non-GMO, 친환경 유기농 학교급식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종합스포츠타운 건립 ▲혁신적 수업시스템과 자율성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만3~5세 누아교육 완전무상교육화 ▲탄소중립 수소학교 추진 ▲광역 교육거버넌스(가칭)전북교육협력위원회 설치 ▲입기제장학사 도입·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